

# 사건계수자료(GDELТ)를 활용한 한·중 양자관계 역학 분석\*

이성우\*\*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검증
- II. 기존연구의 평가와 이론의 제시 IV. 결론
- III. 한중관계의 분석: 가설과 이론의

## | 논문요약 |

한중수교 30년간 중국은 도움과 조연을 구하는 국가에서 경쟁자를 거쳐 간섭과 압력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려는 패권국으로 변화했다. 중국의 변화와 한중외교에 대처를 위해 역학관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GDELТ 사건계수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부의 변화에 상응하는 양자관계의 변화를 논의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1992년 5월~2022년 5월까지 360개월(30년)을 대상으로 한중관계와 미중관계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분석했다.

결론은 한중관계의 주요 변인은 호혜성, 국제질서의 변화, 미·중 세력균형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인접국인 한중관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3자 위협' 가설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통계분석에 대한 논의의 결론으로 제시하려는 정책제언은 중국과 산업, 경제, 기술 분야에서 한국 스스로 공세적인 외교와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한중관계, 중한관계, 시계열 분석, 호혜성, 3자 위협

\* 이 논문은 경기연구원의 기본관제 “사건계수 자료를 활용한 한·중관계 시계열 분석: 협력과 갈등의 역학”(2022)을 발췌·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I. 들어가는 말

한국은 대외관계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정부 출범 단계부터 단독정부의 정통성을 국제연합으로부터 인정받은 역사적 경험과 곧 이은 6·25에서 UN군의 도움으로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출발점이다. 이후 지정학적 위치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객관적 조건과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관계된 이른바 주변 4강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국력의 취약성으로 주변국의 대외정세 동향을 긴밀하게 살펴야 하는 처지에서 비롯되었다.

국제관계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주변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학문적 발전에 좋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국제정치 및 대외정책연구는 국제정치의 이론적 발전이 아니라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학에 근거해 발전해왔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전문분야는 외교부의 부서 구성과 같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같이 지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정부의 부서는 세계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부서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학문적으로 사회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에서 연구의 분야와 전공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리적 위치를 따르는 것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중관계 연구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중국을 하나의 전공 분야로 다루지만, 정치학(political science)의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비교정치, 국제관계, 정치학 방법론과 같은 전공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 다루어야 한다. 전공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문적 풍토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가 하나의 전공 분야로 인식되고 다루어진다. 이러한 지역학과 정치학의 혼재하는 학문적 현실에 대해 과학철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흥미로운 논쟁이 제시되고 있다. 한중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과학철학과 방법론적 고민을 통해 논리실증주의를 복잡한 외교관계의 현실을 단차원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비판하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범칙-연역(deductive-nomological)에 따른 범칙 정립적 방법을 비판하고 가추-역행추론(abduction-retroduction)에 따른 개체 서술적(ideographic) 연구의 적절성

을 강조한다(주장환 2022, 46-47).

중국의 대외정책을 다루는 지역학에서 과학철학적 논쟁이 제기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논리실증주의(positivism)의 근간이 되는 과학철학의 기준에 따르면 연역적(deductive) 접근보다 귀납적(inductive) 접근이 법칙 정립적(nomothetic)인 과학적 방법론에 더 근접한다(Kuhn 2012). 과학적 방법론에서 법칙 정립적 연구를 위한 경우와 개체서술적(ideographic) 연구가 인과관계를 추적하지 않고 사실을 묘사(description)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학적 방법으로 법칙 정립적 연구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개체서술적 연구는 포괄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원인을 나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과학적 설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법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개체에 관한 서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다.

둘째, 한중관계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실증주의와 구성주의의 이분법적으로 상응하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한중관계에 대한 비판론은 한중관계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인식하는 현실주의 이론의 영향 때문이고 이는 방법론적으로 실증주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낙관론은 자유주의 이론에 따라 한중 양자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자유주의 이론은 현실주의 또는 실증주의의 틀에서 간혀 있는 불완전한 낙관론으로 규정하고 한중관계의 낙관론을 위한 대안 이론으로 구성주의를 제시한다.

한중관계에 관련한 전망, 방법론, 그리고 국제관계 이론이 자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법칙 정립적 접근-현실주의-한중관계 비판론 vs. 개체서술적 접근-구성주의-한중관계 낙관론은 너무 자의적이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모두 법칙 정립적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과학의 법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리실증주의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가 한중관계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한다.

여기서 먼저 논란을 정리하고 다음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주의가 방법론의 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제정치를 인식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이론 틀이다.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제질서가 힘의 산물이 아니라 이를 의식하는 공유된 인식의 결

정이라는 것이며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해는 공유된 생각에 따라서 구성되며, 그래서 개별 행위자인 국가의 생각으로 국제질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온전한 이론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를 통해서 검증해야 하는 하나의 명제이다.

자유주의 이론이 불완전하므로 구성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실증주의의 경험주의 인식론에서 반례가 나타나면 기존의 설명은 곧바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과학철학 논쟁의 원리주의에 기초한 잘못된 인식이다. 자유주의와 구성주의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이론의 틀 또는 패러다임이지 반례가 나타나면 기각되어야 하는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들을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이론’은 자유주의 이론이지만 이를 법칙 정립적 연구를 위해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쟁 데이터(Correlates of War: COW)를 분석했다(Sarkees & Wayman 2010). 민주주의 평화이론의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발생하는 전쟁이 반례에 해당하는데 반례가 나타난다고 해서 민주주의 평화이론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본주의 평화이론’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이론의 외연을 확장한다.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낙관론이 지배하는 선순환이 지속되다가 2016년 사드(THAAD) 배치에 중국이 2017년부터 한한령(限韓令)으로 대응하면서 한중관계는 경제관계의 심화에 안보의제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로 자본주의 평화이론의 반례에 해당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일당 지배체제와 민족주의 성향으로 경제와 사회영역이 정치영역에 종속되는 정향이 있다는 설명이 일종의 이론적 부가 설명(auxiliary belt)에 해당한다.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개체 서술을 넘어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중관계 3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의 부침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고 이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시도이다. 기존의 중국을 하나의 개체로 서술적 방식으로 누적되었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중관계의 변인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활용해 법칙 정립적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한중관계 연구에 실증주의

적 분석 틀과 기준을 적용하여 한중관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제관계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한중관계에 대한 정책제언에서도 통속적인 신중론을 넘어서 세부적으로 정교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 Ⅱ. 기존연구의 평가와 이론의 제시

### 1. 한중관계 연구의 검토

한중관계의 양자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론을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특정한 정치권력의 등장에 맞추어 세계전략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case study)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또는 중국이라는 정치적 실체에 대한 친중(Sinophile)과 반중(Sinophobe)의 프레임으로 양분되어 있고 한중관계를 양자관계의 대등한 틀이 아니라 미·중 관계 틀에서 하위체계로 이해하려고 했다(김홍규 2013).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이지 않은 친중과 반중의 프레임 속에서 연구자들의 이념적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관계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가 연구자가 선택한 시기나 시점의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기조에 대한 사례분석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중국 국력의 성장과 미국과 관계 설정에 따라 연구의 주제와 그에 따른 중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주장이 변화해왔다. 장쩌민(江澤民) 시대부터 중국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도전 세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강대국주의를 통한 ‘중국 위협론’과 국제질서에 긍정적 역할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했다. 중국은 국제질서 또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전제로 한반도 정책을 고민했다(이단 2002, 170). 2002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도약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0년 상반기에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한중경제협력의 틀이 한국의 수출증대와 중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으

로 직접투자의 증대에 대한 예측과 같은 경제 분야에 국한에서 양자관계 또는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 네트워크에 미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익수 1999; 정인교 2001; 김시중 2002).

미·중 관계를 중국의 해외경제 의존도의 증가에 중점을 두고 미국은 중국을 패권 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인식하고 부시(Bush W.) 정부시기에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지만, 오바마(Obama) 정부시기에는 중국의 경제적 역할의 확대와 더불어 상호의존도가 양측에서 증가하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 이해했다.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를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실물과 금융 측면에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하여 양국은 절대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상대적 국익의 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관계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익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상호의존관계로 파악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기수 2009).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의 국력 증가로 세력전의 가능성이 있지만, 군사력에서 미국의 우위와 주도가 계속될 것이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응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Pax Cínica)는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지역다자안보협의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태운 2009).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논란의 하나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관점에서 중국의 역할과 역량에 관해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분석하는 연구자에 따라서 외교정책은 물론 국내정책에 있어서 연구자의 정책적 선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의 가장 심각한 논리는 중국 위협론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상의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의 존재와 역량을 성간외계함대를 이끌고 나타난 선진적인 외계문명으로 간주하고 서구는 아직 은하 사이의 이동이 불가능한 지구인의 의구심과 공포심에 비유하는 설명이다(고성빈 2010, 183-184). 한중관계에 대한 설명은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 또는 반대로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미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한중 양자관계에 대한 분석을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세계질서 또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안에서 파악하고 한중관계를 세계 또는 지역 질서의 하위변

수로 수용하는 논리(박창권 2010; Zhu 2011)는 특별한 이론적 검증 과정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중국의 관점이 비판 없이 수용되는 것은 오바마 정부가 동아시아에 소극적인 대응을 중국이 활용했고 이로 인해 한중관계는 미·중 관계의 하위변수라는 논리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했다(Bader 2013). 2013년 시진핑 지도부는 등장부터 1842년 난징조약(南京條約)으로 홍콩(香港)을 영국에 할양한 치욕스러운 역사를 100년 내로 극복하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맞춰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이 출발점이다. 중국은 중국의 부상과 역할 확대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국의 역할을 당연시했다(옌쉐통 2014). 최근에 들어와서 시진핑 지도부는 특히 이전 지도부가 지켜온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한중관계 연구와 미·중 관계 연구의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개체 서술적(ideographic)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직관적 견해(intuitive opinion)의 제시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세기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도부가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하는 재균형(rebalancing)에 대항해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외연을 역으로 포위하는 역균형(counter balancing)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G2의 지위를 보장받는 ‘새로운 강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를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과 합의가 어렵고 한국의 전략적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는 데 주목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할 것으로 판단했다(김홍규 2013, 47-48). 이러한 차원의 연구는 중국의 역량과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오류가 있다. 냉전시절 미국의 대소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소련의 국가기관과 정보기구는 못할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체제로 상정하고 외교정책을 수립했던 전례를 미국과 한국이 다시 따라가고 있다(Hass 2021).

시계열 분석을 적용한 경험적 연구도 한중관계를 미·중 관계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미·중의 갈등이 한중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른바 ‘3자 협력가설’ 또는 ‘3자 위협가설’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이희정 2022). 미·중 및 한중관계에 대해 GDELT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한중관계 감정지수”로 전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한계와 약점은 1일 단위로 측정되는 사건계수자료를 1년 단위로 누적하여 ‘감정지수’라는 국제관계 분석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1일 단위의 자료를 1년 단위로 전환하면서 사건계수 자료가 제공하는 역동적인 변화(variance)를 분석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중관계에서 중국은 한국의 정책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앞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은 한국이 피해야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명제(김홍규 2013, 46)에 반하는 결과이다.

중국의 국가역량에 대해서 초기 코로나 대응과정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과에 대해 미국의 일부에서는 중국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외부에 보여주기식 성과의 과시와 체제의 약점과 치부를 숨기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Hass 2021). 실제로 코로나 대응과 부동산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보건 및 국내경제 관리에 있어서 국가역량의 한계는 최근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과 이에 따라서 미래에 중국이 대체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대만 침공과 무력 합병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패권도전에 대한 중국의 복잡한 계산과 중국의 국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중국은 자신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도 아직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국내의 한중관계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의 전개에 따라 중국의 국가역량과 역할에 대한 찬반 또는 친중과 반중의 구도로 상반되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론적인 문제는 미·중 경쟁 구도에

대한 이해득실과 정책적 또는 이념적 선호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국력의 취약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중국을 과대평가하여 제시하는 대중 정책은 우리 내부의 우려만 증폭시키고 우려는 불안을 고조시키고 불안은 과잉 대응으로 이어져 적절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도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의 한중관계 연구뿐 아니라 중국의 대외정책연구에도 논리실증주의의 틀에서 국제관계를 양자관계의 시계열 자료에 기반한 분석<sup>1)</sup>에 주목했다. 이러한 분석적 시도는 한중관계 연구와 중국의 대외관계 연구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한계인 특정 시기 연구, 사례연구, 직관에 근거한 의견 중심 논의의 틀을 벗어나 논리실증주의를 적용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했듯이 사례논의 중심의 한중관계 연구에서 실증주의적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 연구의 의미있는 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한중관계의 주요 논리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두 번째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1949년 공산혁명으로 대륙을 통일한 하나의 국가가 등장했지만, 중국의 공산정권은 국내정치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국가발전의 비전을 실행하기까지 1세대에 걸친 암흑기를 경험한다. 국내정치적 혼란을 정리한 정치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1970년대 말 혼란기를 정리하고 실용주의적인 국가발전전략을 개혁개방으로 구체화하여 19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 수립에 합의하게 되는데 한중수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제도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성공한 경험을 가진 한국이라는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1)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 Tsinghua University (2022), "Foreign Relations Data", [http://www.tuuir.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1.htm](http://www.tuuir.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1.htm). (2022년 9월 12일 검색)

북한이라는 전통적인 우방의 반대에도 수교를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1990년대 경제성장의 결과 국내 노동시장과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경제적 한계를 돌파하고 잠재적이지만 광활한 시장개척을 통해 경제도약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이 요구한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우방인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대가로 한중수교를 선택했다.

북·중 관계라는 안보협력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적극적인 동반자관계(伙伴關係)를 통해 양국의 외교관계를 적어도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는 발전적으로 격상시켜 왔다. 한중관계의 위상은 수교 당시의 ‘우호협력관계(友好協力關係)’에서 198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面向21世紀的合作伙伴關係)’로 격상시키면서 실질적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2003년에는 ‘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를 거쳐 2008년에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戰略的合作伙伴關係)’로 격상시켰다(이민규 2022, 62).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지역에서 세계 차원으로 경제에서 군사·안보로 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중 협력의 양적 확대를 질적 심화로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안보 문제의 갈등이 핵심의제로 등장하면서 한중관계의 선순환은 중단되었다.

한중관계가 발전적 성장경로를 진행하던 시기에도 중국 내부 탈북자 처리 문제, 마늘 분쟁, 고구려사와 민족문화, 서해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이 어도 문제와 연계된 해양경계획정, 방공식별구역과 같은 갈등 요인은 존재했지만, 한중 양국 관계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건은 아니었다. 한중은 1992년 수교 이래 10년에 걸쳐서 긍정적인 관계 발전을 이어오다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인 관계 악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중관계의 악화의 현상인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한중 협력에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중국이 대외정책의 확장 과정에 분명한 태도는 1992년 수교 이후 2000년까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해오다가 2010년을 전후해서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면서 한중관계는 불협화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자 한국에서 양자관계에 우려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한다(이민규 2022, 87).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주한미군 기지 배치 결정으로 본격적인 갈등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실제로 이러한 양자관계의 악화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대중 호감도가 2002년 66%에서 2021년에는 22%까지 20년에 걸쳐서 44%가 하락하는 결과에도 나타난다.<sup>2)</sup>

2000년 초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21세기 부강한 국가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발전을 국가목표로 다극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과의 경제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이단 2002, 182). 중국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등장한 다자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국력을 증대시켜서 21세기 부강한 국가로 거듭나는 국가 목표를 전문에 내세웠다(江澤民 1997). 이 시기부터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경제협력이 절실했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한 축이 되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상황의 유지를 기본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장쩌민 주석이 주도한 중국의 3대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그 과정에 북한이 붕괴하여 한반도가 친미 정권이 장악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면서 정치·군사적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위해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생산한 소비재를 수입하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한반도 정책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양자관계는 시작부터 군사 안보와 경제가 분리된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과 중국의 안북경남(安北經南)의 이원화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한국은 중국과 양자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킨 계기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북한 편향이 출발점이라고 본다(이민규 2022). 나아가서 한중관계의 본격적인 악화의 계기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문제의 논의를 위해 8일 전 개통된 한중 간 군사 핫라인을 통한 정상 통화가 불발된 상황을 지적한다. 이러한 중국의 불성실한 대응에는 한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남한에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해

2) Silver, Laura, Kat Devlin and Christine Huang (2020),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2022년 9월 12일 검색)

석한다. 이미 핫라인 설치과정에 사드 배치는 중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사드 배치는 2014년 6월부터 언급되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드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직접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정부 간 공식 소통 채널이 중단되고 한국의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2017년 2월이 되어서야 일부 소통경로가 재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특사단을 파견하면서 한중관계의 소통이 시작되어 연말에 국빈 방문이 이루어질 정도로 개선이 되었지만, 한국의 대중 외교 측면에서 관계개선 과정은 성과보다는 문제가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국빈 방문의 외교 행사를 한국과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으로 활용했다. 중국 당국은 2017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과 관련하여 공항 영접 의전, 혼밥 논란, 수행기자단 구타 사건, 그리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결례를 들고 있다.

수교 이후 30년에 걸쳐서 발생한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사건은 한중관계의 기저를 변화시킨 원인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현상에 가깝다.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국력 향상에 따른 국가 위상이다. 국가의 위상과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존중의 불일치가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은 국제관계 연구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Small & Singer 1973, 597-598). 중국의 국력이 개선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국력과 국력에 상응하는 외교적 위상과 존경, 국가적 역할,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이 한중 양자관계를 규정하는 변수이다.

중국이 국력의 개선을 위해서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포함한 정책 전환을 두 번에 걸쳐서 시도했다. 첫 번째 전환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냉전 질서의 해체가 아시아의 공산국가인 중국의 체제 위기로 이어졌고 이는 중국이 체제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개혁개방을 가속화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발표하고 1980년대 덩샤오핑의

주도로 지역개방정책을 통해 연해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점(點)→선(線)→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했다.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기점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 한중수교가 이뤄진 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도의 협력을 위해서 주변 국가인 한국과 관계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중국의 외교정책은 몸을 낮추어 국력을 기르는 도광양晦(韜光養晦)에서 2001년 WTO에 가입을 기점으로 국제통상 질서에 적극적인 편입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는 이른바 ‘경제적 굴기(崛起)’의 길을 선택했다. 이때까지 도광양晦는 미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겸손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한중 및 중일관계는 별다른 갈등 없이 점진적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전환은 대외적인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외적인 역할의 수행과 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중국의 팽창적 대외정책은 주변국을 상대로 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2002년 시작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시작으로 굴기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은 “해야 할 일은 한다”라는 의미의 유소작위(有所作爲)로 국가 위상을 회복하는 준비 또는 시동 과정이었다. 2010년 국내총생산 총액 기준으로 중국이 당시 세계 2위였던 일본을 추월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적으로 우뚝 선다”라는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본격화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후 2013년 시진핑 집권과 함께 시작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서 본격화되어 미국과 전략경쟁을 위해 주변국의 지지와 참여를 요구하는 “기세가 등등하여 남에게 압력을 가하는” 돌돌뽀인(咄咄逼人)의 공격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의 틀은 단계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단순하게 2000년 이전에 주변국과 외교관계에서 유사점을 찾아가고 차이점은 그대로 인정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2010년 이후로는 화이부동(和而不同) 또는 구동화이(求同和而)로 전환하여 차이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외교정책은 유사점과 차이점의 부조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차이를 부각하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다.

미·중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한국 외교에 가장 부정적인 동아시아 국제 환경이라고 판단이 주류를 이루지만(김흥규 2013, 46), 미·중 대결이 반드시 고정된 상수로 한국의 대외정책에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로서의 여지가 있다. 2016년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한한령으로 명명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보복을 한국기업, 문화행사, 여행 부문에 단행했지만, 2021년 6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대해서 중국은 구체적인 보복 조치 없이 지나갔다. 2022년 이후 전개되는 한중관계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 Ⅲ. 한중관계의 분석: 가설과 이론의 검증

#### 1. 한중관계 가설

국내에서 대외정책의 방향을 정치적 이념과 연계하여 보수는 ‘친미반중’ 그리고 진보는 ‘반미친중’이라는 고정관념을 도식화하는 경향이 있다. 최소승자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을 신속하게 결함하기 위한 선거전략으로서 국가안보라는 반대할 수 없는 유의의제(valence issue)를 내세우고 이를 위해서 동맹관계를 이념적 선호가 반영되는 선호의제(position issue)로 외교관계를 대비하는 것은 선거전략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최악의 전략이다. 한국의 선거에서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안보의제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주요국과 동맹관계도 자주 등장한다.

H<sub>1</sub>. 한중관계 또는 중한관계는 정권의 이념적 선호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에서 한국과 중국 양자관계의 호혜성에 따른 대외정책의 결과이다.

한중관계가 2017년 한국에 미국의 사드 배치 이후로 급격하게 악화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관측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해 한중 및 중한관계는 경제와 사회영역이 정치영역에 종속된다는 정향을 보인다고 한다(주장환 2022, 27).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해 중국은 한한령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조치이지 군사·안보상의 조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한미동맹의 존재나 한국의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과 외교관계는 경제력 특히 한국 상품의 수출시장 제공에 근거한 것이다. 즉 중국은 한국의 제조업 완제품뿐 아니라 한류 드라마와 음악의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분쟁을 외교 정책 도구로 사용했다.

H<sub>2</sub>. 중국은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기 한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선호한다.

한중관계는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명제이지만 미국의 역할이 한중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제시는 없다. 미국의 대중 관계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미국의 대한국 관계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중관계에 미국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서 ‘3자 위협가설’과 ‘3자 협력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갈등과 협력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행태에 미치는 방향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미→중 갈등’이 ‘중→한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협력’이 ‘중→한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한다.

H<sub>3</sub>. 미국의 대중국 갈등의 증가는 중국의 대한국 갈등의 감소로 이어진다.

H<sub>4</sub>. 미국의 대중국 협력의 증가는 중국의 대한국 협력의 증가로 이어진다.

‘3자 위협’가설과 ‘3자 협력’ 가설에 대한 논의이다. ‘미→중 갈등’의 증가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위해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중국이 받아들여 한국에 대한 갈등을 감소시킨다는 ‘3자 위협’ 가설이다. 다음으로 ‘미→중 협력’

의 증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행위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3자 협력’ 가설이다.

## 2. 한중 평화지수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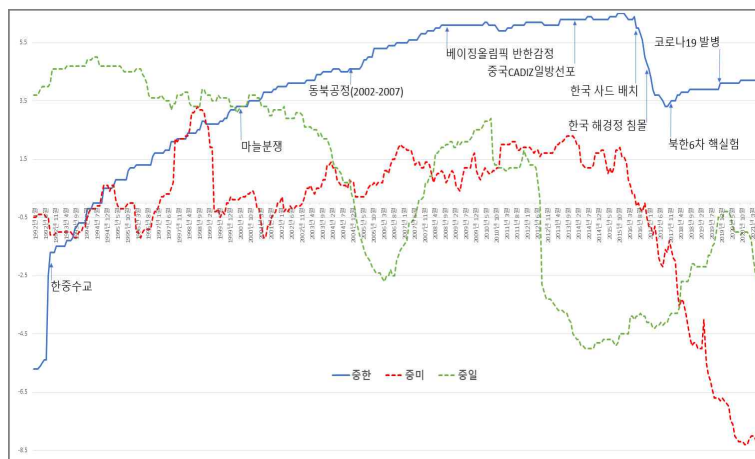
양자관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일반이론의 연구에서뿐 아니라 남북한관계에 대해서도 계량화를 통한 이해와 분석을 시도해왔다. 한국의 학계도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지수화 노력과 사건계수 자료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남북관계를 지수화하는 “통일시계”(박영호·김지희 2009; 박영호·김형기 2011)와 “남북통합지수”(김범수 외 2021)를 만들었고 “한반도 평화지수”(아태지역연구센터 2013)는 사건계수자료 기법을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평화(degree of peace)를 계량화했다.

양자관계에 대한 평화 정도의 측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의 사건계수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학계의 초기 사건계수자료(event count data)는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base)(Azar 1982, 1984)와 World Event/Interaction Survey(WEIS) Project(McClelland 1968)를 시작으로 BCOW, KEDS, PANDA와 같은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거치면서 자료처리의 주체가 사람에서 컴퓨터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KEDS project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해당 사건을 WEIS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2000년대에 출판된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King & Lowe 2003)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연어로 작성된 기사를 기계어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영어로 출간된 뉴스 기사를 기초로 450여 국제관계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양자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를 200여 가지로 분류하여 데이터로 전환하는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초기 사건계수자료는 국가별로 복수의 뉴스 원자료로 이용하는 경우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WEIS 데이터는 New York Times를 단일의 원자료로 활용했지만, KEDS는 Reuters news agency를 원자료로 활용했다. 최근에는 사람이 기사를 읽고 기계어로 전환하는 전문가 코딩에서 컴퓨터가 기계어로 처리하는 사건계수자료 과정에 인공지능과 딥

러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 1979~현재)(Leetaru and Schrodt 2013)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GDELT는 50여 개 국가에서 100여 개의 언어로 출간되는 복수의 뉴스를 활용하여 주요 사건이 발생한 시간, 행위자, 상대방, 행위 등의 정보를 처리하여 매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다.<sup>3)</sup>

<그림 1> 중국의 대 주요국 평화지수<sup>4)</sup>



▪ 1992년 1월 ~ 2021년 9월

국제관계의 계량화를 위한 평화지수의 개발은 중국의 학계에서도 시도가 있었는데 칭화대학(清華大學)의 국제관계연구원(國際關係研究院)이 중국과 주요국의 양자관계를 “외교관계데이터(中國與大國關係分値表: FRD)”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sup>5)</sup> 해당 연구소는 17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국에 해당하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베트남, 한국, 오스트레일리아를 주요국으로 선정하고 1950년 1

3) GDELT는 홈페이지(<http://data.gdeltproject.org/events/index.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4)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singhua University, “Foreign RelationsData”, [http://www.tuiir.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htm](http://www.tuiir.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htm). (2022년 9월 12일 검색)

5) 칭화대학의 국제관계연구소의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tuiir.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htm](http://www.tuiir.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htm))에 공개되어 있다.

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평화지수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중국이 인식하는 주요국 양자관계를 지수화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아쉬운 점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터넷에 데이터 코딩에 대한 소개가 없고 별도의 서적을 통해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FRD의 방법론적인 한계는 중국의 신문 기사를 전문가들이 읽고 이를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당 상대국과의 평화 관계를 지수로 측정된 것으로 상대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평화지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처럼 일방향에 대한 측정은 양자관계의 역학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의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는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한중관계는 6·25전쟁에서 1992년 한중수교를 거치면서 점진적인 개선과 함께 1994년 음에서 양으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인 관계개선과 함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이후 관계 악화가 시작되어 2018년 4월까지 지속되었지만, 음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동년 5월부터 관계 회복을 나타낸다.

중국에서 국제관계를 계량화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FRD는 긍정적이지만 데이터 자체가 가져야 하는 특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다. GDELT로 작성한 한중관계 평화지수와 비교하면 계량화된 지표가 갖추어야 하는 변이성(variance)의 기준에서 FRD는 양자관계의 역학을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GDELT의 협력과 분쟁의 가중치 총합을 활용하여 평화지수를 작성하였다. <수식 1>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양자관계에서 원인국(source)과 상대국(target)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협력과 분쟁에서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평화지수를 작성하였다.

$$\text{<수식 1> 한중 평화지수}_{K \rightarrow C_i} = \frac{\text{협력}_{K \rightarrow C_i}}{\text{협력}_{K \rightarrow C_i} + \text{분쟁}_{K \rightarrow C_i}} \times 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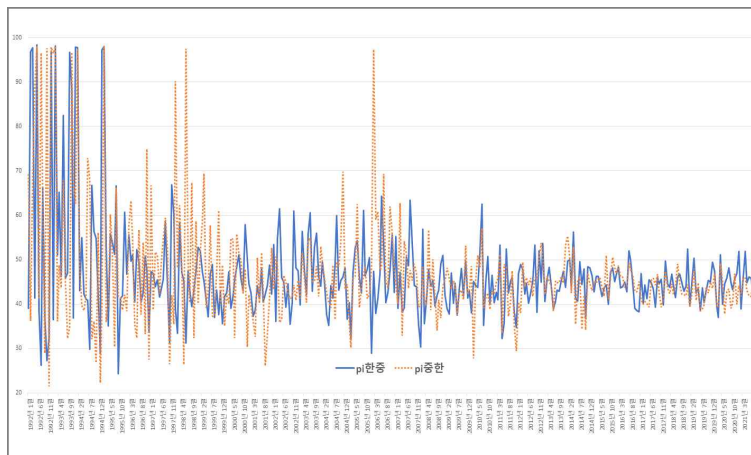
한중평화지수(pi한중)와 중한평화지수(pi중한)를 <그림 2>에 시계열에 따라 표시하였다. 평화지수는 <수식 1>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협력과 분쟁의

6) 한중평화지수의 논리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협력과 분쟁의 가중치 총합에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수식에서 K는 대한민국을, C는 중국을 각각 나타내며 화살표는 한중 양자관계의 방향을 표시한다.

월별 가중치 합산을 활용한 백분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에 따른 양자관계의 평화의 정도만 설명할 수 있다. 이후 한·중 양자 간의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협력과 분쟁의 가중치를 활용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딩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가 전산화된 시점인 197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990년까지도 월별로 실제로 한중 양자관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상당히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한중수교 시점인 1992년 1월을 기준으로 분석통계에 활용했다.

<그림 2> GDELT 한중관계 평화지수<sup>7)</sup>



▪ 1992년 1월~202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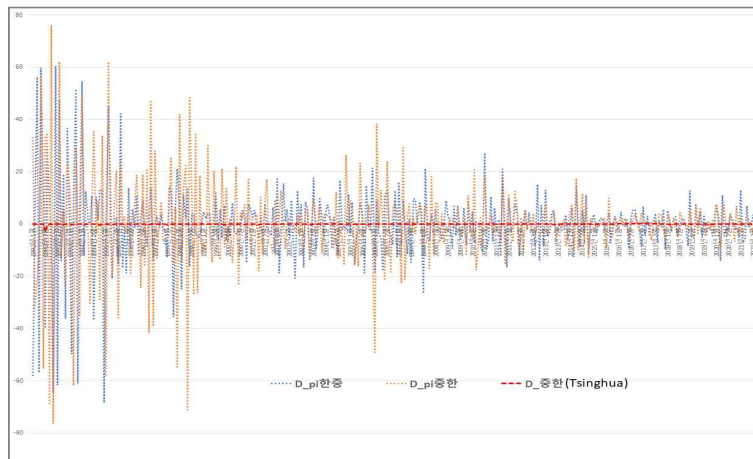
한중 양자관계에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데이터가 갖추어야 할 내재적 특성인 변이성(variance)을 <그림 3>에 비교하여 표시하였다. GDELT의 평화지수는 한중 및 중한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당히 큰 폭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지만, FRD는 변이성이 매월 고정적인 0.1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역학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GDELT

7) GDELT Analysis Service, “GDELT Data”, <http://data.gdeltproject.org/events/index.html>. (2022년 5월 1일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는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림 3> 평화지수 변이성 비교<sup>8)</sup>



▪ 1992년 1월~2021년 9월

### 3. 분석과 논의

#### (1) 양자관계와 정부의 특성

한국의 외교관계는 현실의 작동원리와 무관하게 대중이 생각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에 따라 상당 부분 국내정치적으로 이념적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보수 정부는 ‘안보’와 ‘동맹’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진보 정부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보수는 ‘친미반중’ 그리고 진보는 ‘친중반미’라는 일방적인 도식화가 통념인 것처럼 공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리적 검증을 위해서 HI를 제시하여 한중관계는 우리 정부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정당이 보

8) GDELT Analysis Service, “GDELT Data”, <http://data.gdeltproject.org/events/index.html>. (2022년 5월 1일 검색);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singhua University, “Foreign RelationsData”, [http://www.tuiri.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htm](http://www.tuiri.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htm). (2022년 9월 12일 검색)

수와 진보라는 정부의 이념적 특성이 아니라 개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특성이나 국가의 상대적 국력과 같은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중국 지도부 교체에 따른 양자관계의 특성은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해서도 논증할 수 있다. 한국의 평화지수와 중국의 평화지수를 특징은 냉전 기간 역대 대통령(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정부에서 중국에 대해 평화지수가 탈냉전기 역대 대통령(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의 정부에서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반공을 국시로 출발한 박정희 정부의 평화지수 평균(80.13)은 당시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일체화하여 ‘중공(中共)’이라 불리던 중국과 양자관계에서 협력관계를 추구했던 것은 냉전시기 외교적 확장이 필요했던 당시 정부로서 중국과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박정희 정부가 연구에 포함된 시기는 11개월에 불과하지만, 이 결과는 뒤이은 전두환 정부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일관된 결과이며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 1990년 9월 30일 한소수교에 이어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로 이어지는 과정에 한국의 대중 협력관계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냉전시기 한국의 중국에 대한 평화수준(pi한중)에 비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평화수준(pi중한)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한국의 공세적 북방외교에 대해서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배려가 원인이었다.

한중 양자 사이 평화지수의 일방성이 완화되는 것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남북한 화해협력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대한국 평화지수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국과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결과 평화지수 격차가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외수출형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1분기를 기점으로 GDP 총액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로 부상하기까지 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북단까지 친미 정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과 중간재 수입과 같은 경제적 협력이 절실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정책을 안북경남(安北經南)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한국 역대 정부 한중관계 평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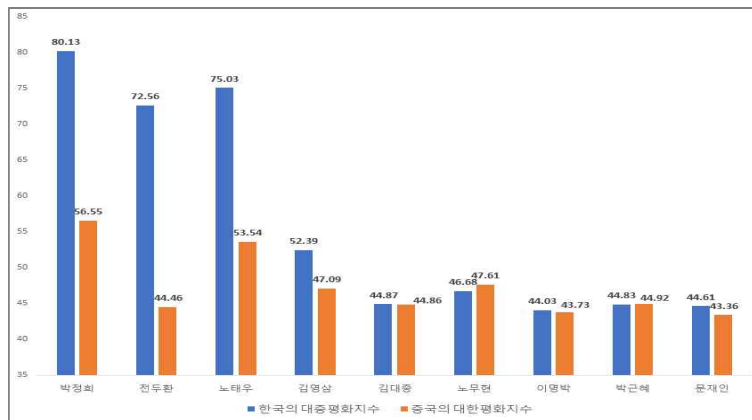
지도자 및 시기	한국의 대중 평화지수	중국의 대한 평화지수
박정희(1979.1~1979.10: 11개월)	80.13 (1)	56.55 (1)
전두환(1980.9~1988.2: 91개월)	72.56 (3)	44.46 (7)
노태우(1988.3~1993.2: 60개월)	75.03 (2)	53.54 (2)
김영삼(1993.3~1998.2: 60개월)	52.39 (4)	47.09 (4)
김대중(1998.3~2003.2: 60개월)	44.87 (6)	44.86 (6)
노무현(2003.3~2008.2: 60개월)	46.68 (5)	47.61 (3)
이명박(2008.3~2013.2: 60개월)	44.03 (9)	43.73 (8)
박근혜(2013.3~2017.3: 49개월)	44.83 (7)	44.92 (5)
문재인(2017.5~2022. 5: 61개월)	44.61 (8)	43.36 (9)
전체기간(512개월) 평균	54.81	45.91

- 박정희 대통령 유고 이후 10개월과 박근혜 탄핵 후 1개월 제외/  
각각의 값은 %, 괄호 안의 숫자는 역대 9개 정부의 등수 표시/  
전체기간은 512개월이나 값이 없는 기간은 생략하고 420개월을 대상으로 평균
- 저자 작성

김영삼 정부의 평화지수는 대중 외교의 전환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탈냉전 초기인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계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인 2000년 10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2002년에 완공한다. 이는 하나의 단편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중관계의 단면을 상징화하는 지표적 사건이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절실했던 당시에는 한국의 해양영토 확장에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부족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국익을 위한 최선의 확장정책을 추진했다.

한중관계에서 평화지수에 호혜적 원칙이 본격 작용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이다. 한중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 분류한 행정부 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중 관계는 대등한 방향으로 진화해왔으며 정부의 이념적 특성을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 근거의 하나로 ‘pi한중’을 기준으로 최근의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44.61)보다 보수적 성향의 박근혜 정부(44.83)가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한국의 역대 정부 한중관계 평화지수



▪ 저자 작성

‘pi한중’과 ‘pi중한’을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평화에서 역대 5번째로 높은 평화지수를 얻었지만, 전두환 정부는 ‘pi한중’(72.56)에 비해 ‘pi중한’(44.46)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는 이념적 특성과 무관한 국제질서, 중국의 필요성과 북·중 관계, 한국의 대외정책의 필요성과 같은 외생적 특성과 변인이 주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국의 ‘pi한중’과 비교해서 중국의 ‘pi중한’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평화의 정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집권했던 덩샤오핑 시기(49.1)는 가장 높은 ‘pi중한’을 유지했는데 이는 냉전기 한국의 협력 요청에 대한 호혜적 원칙에 따른 대응과 실제로 양국 수교 과정에 갈등보다는

협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의 경제력은 급성장하면서 장쩌민(49.5), 후진타오(45.6), 시진핑(44) 지도부로 교체되는 과정에 중국인의 한국 내 해외 활동의 확대와 한중 어업갈등과 같이 양자관계에서 협력보다는 갈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주재우 2022, 64).

실제로 한중갈등에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00년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했다. 만주 지역의 고대사에 대한 한중 간의 인식차에 대한 동북공정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주요 의제가 되었고 이후에서 김치, 아리랑, 한복, 그리고 단오와 같은 역사 문화에 대한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국력이 확장되면서 신장·위구르에 대한 서북공정, 몽골에 대한 북방공정, 베트남에 대한 남방공정, 그리고 티베트에 대한 서남공정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국가 위상개선에 따른 수정주의(revisionist) 국제질서의 반영이다.

한중어업협정은 1998년에 체결되어 2001년 6월 1일 발효하였지만, 본격적인 어업 갈등은 2016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하여 선원 70여 명을 구속하고 18억 3,000만 원(약 1,088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양국 간 분쟁으로 부상했다. 2016년 9월 29일 한국 해경이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 중국 선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10월 7일에는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 고속정에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중국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한·중·일의 환경과학 연구기관이 2000년대 이후부터 10년간 공동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염물질의 30-50%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주현수 2018; 환경부 2019)

2013년 11월에는 공군의 군사작전 지역과 관련된 방공식별구역에 있어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한국은 보름 후인 12월 8일 중국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어도를 포함하는 확대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한국경제』 2013/12/08). 한중 간 분쟁이 문화, 경제, 역사를 넘어 해양 경계선과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2016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한중분쟁은 본격적으로 군사·안보를 넘어 미·중 전략경쟁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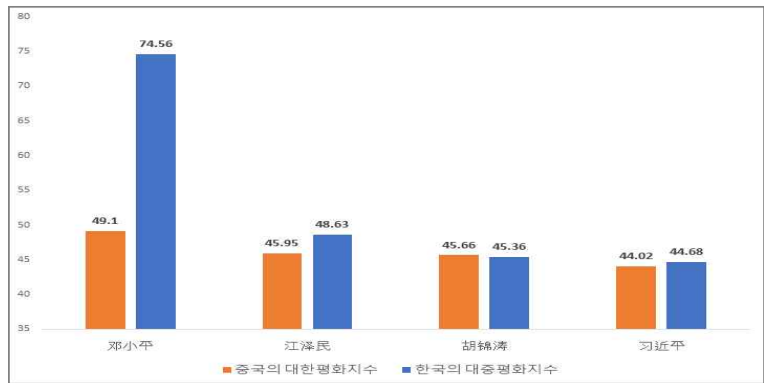
<표 2> 중국 정권의 변화에 따른 중한관계 평화지수

지도자 및 시기	중국의 대한 평화지수	한국의 대중 평화지수
鄧小平(1979.1~1993.3: 170개월)	49.10 (1)	74.56 (1)
江澤民(1993.3~2003.3: 120개월)	45.95 (2)	48.63 (2)
胡錦濤(2003.3~2013.3: 120개월)	45.66 (3)	45.36 (3)
習近平(2013.3~2022.5 현재: 111개월)	44.02 (4)	44.68 (4)
전체기간(512개월) 평균	45.91	54.81

- 중국 정권의 임기는 국가주석을 기준으로 결정, 鄧小平은 주석직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江澤民 취임 시점까지 국가 최고지도자 역할 수행에 중점/ 각각의 값은 %, 괄호 안의 숫자는 역대 9개 정부의 등수 표시/ 전체기간은 512개월이나 값이 없는 기간은 생략하고 420개월을 대상으로 평균
- 저자 작성

중국이 스스로 미·중 양자관계를 G2 또는 신형대국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전략경쟁이 한반도에서 한중갈등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배치이다. 중국 스스로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적 조치라고 선언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이어졌다. 사드 배치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2016년 7월에는 92만 명에서 2017년 6월 25만 5천 명으로 감소했고, 중국에 개점한 롯데마트 분기별 매출은 2015년 3,200억에서 2017년 2분기 210억으로 급감했다(유현정·주재우 2017, 181).

<그림 5> 중국의 역대 정부 중한관계 평화지수



- 저자 작성

결론적으로 평화지수를 기준으로 한중관계의 변화는 한국이나 중국의 지도부 교체에 따른 이념적 특성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 한중관계의 변화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국가적 위상의 확대에 따라 한국과의 분쟁요인이 증가하게 되었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중국의 대한국 평화지수는 큰 변화 없이 소폭 감소했지만, 한국의 대중국 평화지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미국과 전략경쟁 차원에서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여 한중관계가 영향을 받아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면 한중 양국의 평화지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 한중관계와 미국의 역할: 3자 위협 및 협력 가설

한중관계에 대해서 중국의 최근 태도는 전략적으로 한국을 소국으로 무시하고 스스로를 대국으로 칭하는 ‘허세(bluffing) 전략’으로 한중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전략적으로는 한중관계는 미·중 관계에 종속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한국에게 미국보다는 중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태세 전환을 요구해왔다.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버금가는 수준의 망언을 쏟아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4월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정의용 장관에게 미국의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훈계하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천하이(陳海) 외교부 부국장은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기업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라고 발언했다(『조선일보』 2022/01/06).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발언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자조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는 양자 간의 호혜적 원칙이 작용한 결과이며 한중관계에 미국의 역할은 있지만, 중국의 주장하는 ‘대국’의 모습과는 수준과 방향에서 차이가 크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분석을 위해서 우선 시계열 자료에 대한 기본 요인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Dickey-Fuller unit root 테스트를 통해 stationarity 결과를 보면 모든 양자관계 변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종합지수(XSHG)의 stationary test는 p값이  $z(t)=0.3644$ 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1차 차변을 한 결과 p값이  $z(t)=0.000$ 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를 얻었고 결과는 아래의 <표 5>에 제시하고 있다.

<표 5> Stationarity Test 결과

	cKtoC 협력한→중	cCtoK 협력중→한	cKtoA 협력한→미	cAtoK 협력미→한	cAtoC 협력미→중	cCtoA 협력중→미
p 값	0.0000	0.0000	0.0000	0.0000	0.0009	0.0006
	dKtoC 분쟁한→중	dCtoK 분쟁중→한	dKtoA 분쟁한→미	dAtoK 분쟁미→한	dAtoC 분쟁미→중	dCtoA 분쟁중→미
p 값	0.0000	0.0000	0.0000	0.0000	0.0007	0.0005

회귀분석을 위해 변수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여 아래의 <표 6>에 제시하였다. 양자관계 조합에서 분쟁에 비해 협력은 호혜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한→중 협력’(cKtoC)과 ‘중→한 협력’(cCtoK)은 상관계수가 0.969이며 ‘한→미 협력’(cKtoA)과 ‘미→한 협력’(cAtoC)도 0.967로 나타난다. ‘한→중 분쟁’과 ‘중→한 분쟁’은 상관계수는 0.67이며, ‘한→미 분쟁’과 ‘미→한 분쟁’의 상관계수는 0.875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조합에서는 하나의 변수만 포함하여 회귀분석(OLS)을 시행했다.

<표 6> Correlations Test 결과

	dCtoK	dKtoC	cCtoK	cKtoC	dAtoC	dCtoA	cKtoA	cAtoK	XSHG
dCtoK	1.000								
dKtoC	0.673	1.000							
cCtoK	0.369	0.259	1.000						
cKtoC	0.378	0.329	0.969	1.000					
dAtoC	0.005	0.202	0.042	0.072	1.000				
dCtoA	0.028	0.074	0.063	0.077	0.875	1.000			
cKtoA	0.227	0.219	0.338	0.350	0.106	0.067	1.000		
cAtoK	0.244	0.245	0.374	0.377	0.099	0.061	0.967	1.000	
XSHG	-0.05	-0.03	-0.08	-0.09	-0.04	-0.03	-0.05	-0.06	1.000

회귀분석 모델은 다음 <수식 2>와 같이 정의했다. 종속변인을 ‘중→한 분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1시점 전(t-1)의 ‘중→한 분쟁’, ‘한→중 협력’과 ‘중→한 협력’ 그리고 독립변인으로 ‘미→중 분쟁’과 ‘미→중 협력’을 포함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sup>9)</sup> 본 모델을 나타내는 <수식 2>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XSHG)<sup>10)</sup>를 포함하였고  $\varepsilon$ 는 오차항을 각각 나타낸다.

$$\begin{aligned} \text{<수식 2>} \quad dCtoK_t = & \alpha_0 + \beta_1 dCtoK_{t-1} + \beta_2 dKtoC_t + \beta_3 cCtoK_t + \dots \\ & \dots \beta_4 cKtoC_t + \beta_5 dAtoC_t + \beta_6 cAtoK_t + \beta_7 XSHG_t + \varepsilon_t \end{aligned}$$

본 시계열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은 월별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1992년 5월부터 시계열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분석 시기는 1992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60개월(30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했고 결과는 <표 6>에 표시하였다. <모델 1>은 중→한 갈등, <모델 2>는 한→중 갈등, <모델 3>은 중→한 협력, <모델 4>는 한→중 협력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모델을 설정하였고 <모델 3a>와 <모델 4a>는 <모델 3>과 <모델 4>에서 호혜성 변인의 작용으로 R2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호혜성 변수를 생략하고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짙은 색 배경으로 표시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의식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분쟁을 증가시키는 조건이다. 이 질문에 대한 <모델 1>의 결과에 따르면 ‘중→한 분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독립변인은 ‘한→중 분쟁’(0.87)이다. 다시 말해서 호혜성(reciprocity)과 Tit-for-Tat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한국과 중국은 분쟁에 분쟁으로 서로 대응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상하이 종합지수(XSHG)는 4개 모델 전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부의 경제상황이 대외관계에 특히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9) 앞으로 논의에서는 변수를 직관적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분쟁은 ‘source→target action’의 원칙에 따라 ‘중→한 분쟁’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10) 상하이 종합지수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92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 주가 지수이다. 1991년 7월 15일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표 6> 한중 양자관계 회귀분석 결과

	모델1 ΔdCtoK	모델2 ΔdKtoC	모델3 ΔcCtoK	모델3a ΔcCtoK	모델4 ΔcKtoC	모델4a ΔcKtoC
L1ΔdCtoK	-0.03 (0.04)	-	-	-	-	-
L1ΔdKtoC	-	-0.08** (0.03)	-	-	-	-
L1ΔcCtoK	-	-	-0.01** (0.01)	-0.36† (0.41)	-	-
L1ΔcKtoC	-	-	-	-	-0.03** (0.01)	-0.37† (0.04)
ΔdCtoK	-	0.52† (0.03)	0.18† (0.04)	0.72† (0.13)	-0.11† (0.04)	0.56† (0.12)
ΔdKtoC	0.87† (0.05)	-	-0.32† (0.05)	-0.09 (0.17)	0.31† (0.04)	0.22 (0.16)
ΔcCtoK	0.31† (0.07)	-0.33† (0.05)	-	-	0.91† (0.14)	-
ΔcKtoC	-0.24† (0.07)	0.35† (0.05)	0.99† (0.16)	-	-	-
ΔdAtoC	-0.07† (0.02)	0.07† (0.01)	-0.01 (0.01)	-0.01** (0.04)	0.001 (0.01)	-0.09** (0.04)
ΔcAtoC	0.07† (0.02)	0.06† (0.02)	0.02 (0.01)	0.05 (0.05)	-0.01 (0.02)	0.04 (0.05)
ΔdCtoA	-0.07† (0.02)	-0.07† (0.01)	0.0001 (0.01)	0.03 (0.04)	0.002 (0.01)	0.02 (0.04)
ΔcCtoA	0.05** (0.02)	-0.05† (0.01)	-0.01 (0.02)	0.02 (0.05)	0.01 (0.02)	0.04 (0.05)
ΔcAtoK	-0.09** (-0.04)	0.07** (0.03)	0.11† (0.03)	0.31† (0.11)	-0.08† (0.03)	0.22** (0.11)
ΔcKtoA	0.1** (0.04)	-0.08** (0.04)	-0.11† (0.03)	-0.23* (0.11)	0.09† (0.03)	-0.13 (0.11)
ΔdAtoK	0.1† (0.03)	0.03 (0.03)	0.02 (0.03)	0.1 (0.1)	-0.002 (0.03)	0.11 (0.09)
ΔdKtoA	-0.06 (0.04)	0.07 (0.31)	-0.005 (0.03)	0.05 (0.1)	0.006 (0.03)	0.02 (0.09)
ΔXSHG	-0.04 (0.08)	0.05 (0.06)	0.09 (0.06)	-0.03 (0.2)	-0.09 (0.05)	-0.12 (0.2)
Cons	1.04 (16.03)	-0.38 (12.4)	-0.27 (12.1)	1.31 (41.7)	0.41 (11.54)	1.69 (39.8)
	R2=0.59 adjR2=0.58	R2=0.63 adjR2=0.61	R2=0.95 adjR2=0.94	R2=0.41 adjR2=0.39	R2=0.95 adjR2=0.94	R2=0.42 adjR2=0.39

▪ 변수는 dCtoK에서 d는 dispute 그리고 c는 cooperation, 대문자는 국가명으로 A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는 China, 그리고 K는 Republic of Korea를, 그리고 to는 행위 방향/ L1은 시차를 Δ는 차변을 의미/ 통계적 유의도는 † p<0.005, \*\* p<0.05 \* p<0.06를 각각 나타냄

‘한→중 협력’(-0.24)의 증가는 ‘중→한 분쟁’의 감소로 이어진 결과는 상식적인데 ‘중→한 협력’(0.31)의 증가는 ‘중→한 분쟁’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협력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를 동반하며 양자관계에서 협력과 분쟁은 상호 배타적(exclusive)이지 않고 상호 강화적(reinforcing)이다. 협력이 증가하면 이 과정에 협력에 따른 이익의 배분 과정에 갈등이 동반하여 증가한다(Yi 2008, 94-95). 한중관계도 수교 이후 협력이 증가하면서 갈등도 증가했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미→중 분쟁’(-0.07)의 증가는 ‘중→한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중국이 미국의 분쟁을 감당해야 하므로 한국에 대한 분쟁을 전개할 여력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고 한미동맹에 따라 ‘미→중 분쟁’이 중국에 압박 또는 위협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미→중 협력’(0.07)의 ‘중→한 분쟁’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국은 한국과 양자관계에 미국의 존재감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림 6> 한중관계에 미중관계의 역할



▪ 저자 작성

다음으로 중요한 결과는 ‘중→미 분쟁’(-0.07)의 증가는 ‘중→한 분쟁’의 감소로 이어지고 ‘중→미 협력’(0.05)의 증가는 ‘중→한 분쟁’의 증가로 이어진다. 중국은 미국과 분쟁이 심화하는 국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분쟁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협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한 분쟁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중국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나타낸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협력과 분쟁의 양상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은 한국이 피해야 하는 국제질

서라는 통속적인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Model 1>의 결과는 한중관계는 호혜성이 주요 변인이며 중국이 표면적으로 스스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G2 또는 신형대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행태는 미국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 한중관계에 중미관계의 역할



▪ 저자 작성

<모델 2>는 ‘한→중 분쟁’을 종속변인으로 미국과 관계의 영향력을 검증했는데 ‘중→한 분쟁’(0.52)이 ‘한→중 분쟁’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독립변인으로 호혜성의 원칙이 작용한다. 앞의 <모델 1>과 다른 점은 내생변수의 t-1이 통계적 유의도를 가지는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한→중 분쟁’(-0.08)은 상승효과(escalation)보다 축소효과(deescalation)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중 협력은 앞의 분석과 정확하게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중→한 협력’(-0.33)의 증가는 ‘한→중 분쟁’을 감소시키지만, ‘한→중 협력’(0.35)은 ‘한→중 분쟁’을 증가시켰다. 앞의 <모델 1>의 설명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결과이다.

‘한→중 분쟁’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중→한 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미→중 분쟁’(0.07)의 증가와 ‘미→중 협력’(0.07)의 증가 모두 ‘한→중 분쟁’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행태도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미 분쟁’(-0.07)의 증가와 ‘중→미 협력’(-0.05)의 증가 모두 ‘한→중 분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미→중 협력’과 ‘미→중 분쟁’의 증가에 무차별적으로 ‘한→중 분쟁’을 증가시키지만, ‘중→한 협력’과 ‘중→한 분쟁’의 증가에 무차별적으로 ‘한→중 분쟁’을 감소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시계열 분석인 백터자기회

귀(VAR), 그랜저 인과성(Granger causality),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등을 차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중 양자 협력에 대한 설명은 <모델 3>과 <모델 4>에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중 협력 양방향 모두 호혜성이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R2 값이 95%로 나타나 호혜성 변수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모델 3a>와 <모델 4a>에 각각 제시하였고 분쟁과 비교해서 역학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내생변수의 t-1과 관련하여 <모델 3a> ‘중→한 협력’과 <모델 4a> ‘한→중 협력’ 모두 상관계수가 -0.36과 -0.37로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축소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쟁과 마찬가지로 협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는 분쟁과 협력 모두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면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쟁이 계속 확대되지 않는 것처럼 협력도 지속되지 않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다.

중국과 한국의 협력에 관련한 통계분석의 결과는 분쟁행위를 분석한 결과와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한 변수의 효과가 ‘중→한’과 ‘한→중’에 교차하여 나타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분쟁과 협력의 상관관계는 <모델 3a>에 따르면 ‘중→한 분쟁’(0.72)의 증가는 ‘중→한 협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모델 4a>에 따르면 ‘중→한 분쟁’(0.56)은 ‘한→중 협력’의 증가로 이어진다. <모델 3a>의 결과는 분쟁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협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내생변수 t-1와 일관된 결과로 중국도 한국과 양자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요구하고 분쟁을 관리하는 정상적 양자관계를 의미한다. <모델 4a>의 결과는 부정적인 함의가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분쟁을 확대하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협력을 증가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 망언을 경험적으로 지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 분쟁’은 ‘중→한’ 및 ‘한→중’ 협력에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데, <모델 3a>에 따르면 ‘미→중 분쟁’(-0.01)의 증가는 ‘중→한 협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모델 4a>에 따르면 ‘미→중 분쟁’(-0.09)의 증가도 ‘한→중 협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미국이 중국에 분쟁을 강화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협력

도 감소시키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협력도 감소시키지만,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협력의 감소 효과가 상관계수 기준으로 9배 더 크다. 이 결과는 미국의 분쟁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식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이 중국에 대한 협력을 더 큰 폭으로 줄인다는 점에서 전통적 인식과 일관된 결과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분쟁을 확대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협력을 더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미국에 편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의 <모델 1>과 <모델 2>의 결과와 비교하면 한국의 처지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분쟁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분쟁에는 긍정적이지만 반면 협력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한 협력’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계열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미국이 한국의 대중 외교에 압박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한 협력’(0.22)의 증가는 ‘한→중 협력’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미 양국 협력의 영향에 관해서 ‘미→한 협력’(0.31)의 증가는 ‘중→한 협력’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미→한 협력’(0.22)의 증가는 ‘한→중 협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협력’(-0.23)은 ‘중→한 협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미국이 한국에 보이는 협력은 미국의 호의로 생각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협력을 증가시키는 반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협력은 한국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협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IV. 결론

한중 양자관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 계기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 한중관계에 대한 실증주의적 분석을 통해 양자관계의 본질을 논의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주요국 외교관계에 대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적용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주요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이른바 지역 전문가들의 사례 중심의 논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국가와 양자 외교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특정 사례 중심의 개체 서술적(ideographic)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칙 정립적 분석을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새로운 논점은 한중관계를 보는 기존의 통속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한중 양자 사이의 외교 현상을 분석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제시에 있어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자는 점이다. 앞의 통계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 한중관계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념적 특성과 무관하게 국익 추구를 위한 외교 행위이다. 따라서 (2) 한중관계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미·중의 국력 확장에 연계된 국제질서의 변화, 한국과 중국의 국가 위상의 변화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행위는 대국과 소국의 관계가 아니라 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의 일반적 양자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과 분쟁의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는 호혜성이다. (4) 미국의 대중 분쟁이 중국의 한국분쟁을 감소시키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은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는 미국의 영향력이 한중관계에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강조하고 싶은 시각은 중국은 우리에게 수출시장이지만 본질적으로 산업, 기술, 경제에서 한국과 경쟁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계에서 논의하는 전통적인 개체서술적 논의가 제시하는 한중관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을 기본 축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5.9%이고 홍콩과 합계하면 31.1%에 이르고 미국은 14.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대중국 외교 신중론의 근거가 된다. 홍콩과 중국 수출을 합한 대중 수출의존도에서 호주는 41%, 일본은 25.6%, 대만은 41.5%에 달한다(『중앙일보』 2022/05/09)는 점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국의 수출시장인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80%가 중간재이고 15%가 자본재이며 소비재는 3.7%에 불과하다. 중

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중국이 가공무역에 필요한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부품과 같이 기술과 비용면에서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필사적인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다. 우한홍신반도체제조(HSMC)는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반도체 양산 프로젝트가 좌초되었고 SMIC(中芯國際), 칭화유니(淸華紫光),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CXMT·長鑫存儲)가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중국은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입(444조 원)을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의 이런 의도가 분명하다면 한국의 대중 외교는 경제, 산업, 기술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초격차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중국과 산업과 기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중 외교는 더욱 공세적인 입장에서 양자관계를 이끌어가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산업과 기술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G7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 미국이 주도하는 IPEF 가입, 칩4 동맹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호의를 구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방력을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재래식 국방력에서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고 3위인 중국과 격차가 있지만(Global Fire Power 2022), 수세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속해서 홍콩의 민주화나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대중 압박에 한국의 역할과 목소리를 요구해왔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QUAD의 확대에 참여하는 것도 한국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의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협상안을 미국에 제안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성빈 (2010). “‘중국위협론’에 대한 비판적 사유: 허위의식의 그물.” 『진보평론』. Vol. 44, pp. 183-216.
- 김기수 (2009). “미중경제, 구조적 상호의존관계.” *Chindia Plus*. 제29권, pp. 31-33.
- 김범수·김병연·김학재·이경수 (2021). 『2020 남북통합지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시중 (2002). “중국 WTO 가입의 의의와 한중경제관계에의 파급효과.” 『현대중국연구』. 제4집. 1호, pp. 117-164.
- 김익수 (1999). “중국의 WTO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태운 (2009). “미·중 간 세력전이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협력질서.” 『아시아연구』. 제12권. 1호, pp. 33-52.
- 김홍규 (2013). “시진핑 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국방연구』. 제56권. 3호, pp. 27-54.
- 박영호·김지희 (2009). 『통일예측시계 구축』. 통일연구원.
- 박영호·김형기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 통일연구원.
- 박창권 (2010). “미중관계의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외 안보협력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6권. 2호, pp. 95-135.
-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한반도 평화지수』. 한양대학교.
- 양평섭 외 (201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엔체통 (2014). 『2023년 세계사 불편의 법칙』. 고상희 역. 글항아리. [閩學通 (2013). 『歷史的慣性』. 中信出版社.]
- 유현정·주재우 (2017).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권. 2호, pp. 167-186.
- 이단 (2002). “강택민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와 대한반도 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22집, pp. 170-195.
- 이민규 (2022). “정치외교 짙어진 미중관계 종속화와 ‘구동화이’ 접근 필요.” 주장환·이민규·김선재·최필수·김수한·표나리.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pp. 61-94.
- 이희정 (2022). “미중갈등과 한중관계 분석(2011-2020): GDELT 빅데이터 기반 시계

- 열 분석.” 『중국학 연구』. 제99집, pp. 135-128.
- 정인교 (2001).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가 한중일 3국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31-64.
- 주장환 (2022). “시각 난관론과 비관론의 그 평행선적 양립을 넘어.” 주장환·이민규·김선재·최필수·김수한·표나리. 『한중수교 30주년 성찰과 대안』.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pp. 25-57.
- 주재우 (2022). “한중관계와 북한의 전략적 함수관계 해독법.”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3호, pp. 55-86.
- 주현수·김채운·최민욱 (2018). “한중일 3국의 미세먼지 농도분석.” 『KEI 포커스』. 제6권. 제10호, pp. 1-23.
- Zhu Feng (2011). “변화와 조정: 동아시아의 미·중관계 및 안보 원동력.” 배정호 편.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pp. 35-49.
- Azar, Edward (1982). “Conflict and Peace Data Bank 1948-1978.” International and Domestic Files (ICPSR7767), Second ICPSR edition.
- \_\_\_\_\_ (1984). “The Conflict and Peace Data Bank (COPDAB) Proje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1, pp. 143-152.
- Bader, Jeffrey A (2013).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Hass, Ryan (2021). “China Is Not Ten Feet Tall: How Alarmism Undermines American Strategy,” *Foreign Affairs*. March 3.
- King Gary and Will Lowe (2003). “An Automated Information Extraction Tool For International Conflict Data with Performance as Good as Human Coders: A Rare Events Evaluation Desig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7. No. 3, pp. 617-642.
- Kuhn, Thomas S. (201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50th Anniversary e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taru, Kalev and Philip A. Schrodt (2013).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eetings, San Francisco, April 2013.
- Sarkees, Meredith Reid and Frank Wayman (2010). *Resort to War: 1816 - 2007*. Washington DC: CQ Press.
- Small, Melvin and J. David Singer (1973). “The Diplomatic Importance of States, 1816-1970: An Extension and Refinement of the Indicator.” *World Politics*.

Vol. 25. No. 4, pp. 577-599.

Yi, Seong-Woo (2008). "The Na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Events: Are they mutually exclusiv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8. No. 5, pp. 81-103.

## 2. 기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2019). 『미세먼지 팩트체크: 미세먼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부.

“방공식별구역 62년만에 수정…한·중·일, 이어도 겹쳐 분쟁 불씨.” 『한국경제』. 2013년 12월 8일.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중에 항의 한번 못해.” 『조선일보』. 2022년 1월 6일.

“<중간재 교역> 한중 무역에 대한 3가지 우려, 모두 기우였다?” 『중앙일보』. 2022년 5월 9일.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推向二十一世紀—在中國共產黨第15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人民日報』. 1997년 9월 21일.

GDELT Analysis Service, “GDELT Data”, <http://data.gdeltproject.org/events/index.html>. (2022년 5월 1일 검색)

Global Fire Power (2022). “2022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2022년 5월 1일 검색)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 Tsinghua University (2022). “Foreign Relations Data.” [http://www.tuiir.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1.htm](http://www.tuiir.tsinghua.edu.cn/imiren/Publications/Foreign_RelationsData/1.htm). (2022년 9월 12일 검색)

Silver, Laura, Kat Devlin and Christine Huang (2020).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ts in Many Countri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2022년 9월 12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2년 08월 09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08월 23일 |

| 게재확정일 : 2022년 09월 15일 |

| ABSTRACT |

## **A Time Series Analysis of the Dynamics of Korea–China Relations with GDELT Data**

**Seong Woo YI**

(Gyeonggi Research Institute)

For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has transformed from a country seeking help and advices from South Korea to a competitor and now into a clumsy hegemon that seeks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 through interference and pressure to the former mentor.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importance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China diplomacy and the necessity to provide an appropriate policy suggestion to cope with China’s transformation.

As a conclusion, the main variables in Korea–China relations are reciprocit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systemic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Regarding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Sino–Korea rel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three-way threat hypothesis works. In other words, the U.S. affects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Korea in terms of the Korea–China bilateral relations, which are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The policy proposal to be presented as the conclusion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requires South Korea’s oppressive and aggressive diplomacy to China and the ROK–US alliance with China in the fields of industry, economy, and technology.

- Key words: Korea–China Relations, Sino–Korea Relations, Time Series Analysis, Reciprocity, Third-Party Threat